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191 보라색과 생활

“보라색은 알 듯 모를 듯 고약한 웃음소리이다”

색채와 음계
 뉴턴(Newton, Isaac, 1642년~1726년)은 톤의 비례에 따라 색채와 음계로 7단계로 나누었다. “보라는 시(b)를 상징한다.”
 스위스의 취리히 대학교 연구팀(네이처 2005년 2월 2일)은 2003년부터 1년 동안 음정을 들으면 색깔을 느낀다는 음악가인 여성을 연구하였다. “이 여성은 F단조를 보라색으로 인식하였다.”
색채와 소리
 색청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색채 혹은 그림자 같은 것이 나타나는 공감각(synesthesia,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갈턴(Francis Galton)이 19세기 말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하였음)의 형태를 말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같은 색깔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음계마다 서로 다른 색채가 나타난다.
 소리에는 6가지 색깔이 있다고 한다. “보라색은 비웃음인지, 칭찬하는 웃음인지, 알 듯 모를 듯 고약한 웃음소리이다.”
 라비냐크(Albert Lavignac)은 그의 저서인 음악과 음악가(Music and Musicians)에서 관현악의 편성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관현악의 편성 법은 색채를 응용하는 화가와 매우 흡사하며, 음악가

의 팔레트(palette)는 오케스트라의 리스트(list)이다. 음악가는 이것을 자기의 생각, 선율의 디자인, 화성의 조직을 톤으로 표현한다. 빛과 음영을 다루기 위해 화가가 색채를 배합하는 것처럼 톤을 혼합한다. 이러한 이론으로 볼 때, 군악이나 화려한 취주악은 다른 종류의 장식회화와 일치한다. 실내음악은 매우 부드럽고, 미묘한 색채 농담을 가진 수채화와 같다. 각 악기는 자신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 악기의 특별한 성질이다. 관찰자의 눈과 귀 차이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비냐크는 그의 저서에서 5가지 색을 악기와 연결시켰다. “보라색은 처량한 영국 특유의 호른 ‘cor anglais’의 소리이다. 이 소리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체념을 호소한다.”
 러시아의 화가인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 1866년~1944년)는 그의 저서인 정신적인 조화의 예술(The Art of Spiritual Harmony, Houghton Mifflin Co., Boston, 1914.)에서 색을 운동으로써 파악하였다. “보라색은 바순이라고 했다.”
색채와 제품
 독(毒) 초록의 작은 유리병에 담긴 크리스티안 디오르(Christian Dior) 향수는 보라색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 향수의 이름은 ‘뿌아중

(Poison)’이지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이라는 의미이다.
 연보라색과 보라색은 ‘성숙한’ 여성을 위한 화장품의 포장으로 사용되었다. 보라색이나 연보라색은 초콜릿 포장으로 늘 인기가 높으며, 보라는 달콤한 죄의 색이기도 하다.
 보석함은 흔히 보라색 벨벳으로 장식되어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궁정 보석상 에스프레이(Asprey)는 매우 특이한 색, 다시 말해서 빨간색을 띤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케첩 브랜드 하인즈(Heinz)사는 최근에 보라색 케첩을 출시했다. 보라색 자동차는 1995년 처음으로 유행되었는데 주로 소형차와 여성을 위한 모델이었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따뜻한 햇살로 오월의 진실을



취재수첩 김혜인 사회부 기자 hyein.kim@jnilbo.com

복풍과 태양이 힘겨루기를 하던 중 길을 걸어가는데 나그네를 보며 누가 먼저 그의 외투를 벗기는지 내기를 했다.
 먼저 복풍은 강한 바람으로 외투를 날려버리려고 했으나 바람이 세질수록 나그네가 더 웃을 여미기만 할 뿐 끝내 벗기지 못했다. 하지만 태양은 나그네에게 다가가 뜨거운 햇빛을 내리쬐고 날씨가 더워지자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던졌다. 결국 태양이 승리했다.
 5·18공법단체 2곳과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가 추진한 ‘포용과 화해와 용서, 대국민 공동선언식’과 ‘오늘의 증언이 5·18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를 보며 떠오른 이송우화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광주시민의 염원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나 성격을 두고 시민사회와 추진 단체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며 진상규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수 차례 고민했다.
 그러던 중 지난 14일 3공수여단 소속이었던 김귀삼 중사의 증언과 고백이 진행됐다. 공교롭게도 김씨의 옆자리에는 김태수 부상자회중앙회 이사가 앉아있었고 이 둘은 광주교도소 앞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것으로 밝혀졌다.

왜 쫓나는 질문에 김씨는 “교도소로 접근하는 모든 차량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이에 따라 위협사격 차원으로 자동차 바퀴를 겨냥해 쫓지만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그러자 당시 5·18 현장에서 부상당하거나 사태를 목격했던 이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포로로 잡아들인 계엄군의 이름을 언급하며 기억나는가를 묻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남대 일대에서 발포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말에 내가 전남대 교정에서 총을 맞은 당사자라며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속해서 손을 들어 그날의 진실을 묻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이들이 진실에 목말랐는지 조금이나마 가능할 수 있었다.
 광주 시민을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군 햇살로 짓눌리고 몽둥이로 수 차례 두들겨 맞아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저항정신이 ‘북한군’, ‘폭도’라는 이름으로 지워질 뻔한,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러한 진상규명을 계엄군당사자가 협력하고 나선다는 것에 그 누구도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진실을 덮은 외투를 붙잡고 벗으려 하며 강한 복풍을 날리는 것이 아닌, 화해의 마음으로 따뜻한 햇살을 비추다면 진상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광주시민들과 영령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계엄군을 향한 반목은 이제 접어들 때다.

기고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UN ‘세계 물의 날’ 맞아 물위기 극복 변화 가속화

3월22일 UN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생명의 근원인 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다. 기후 위기로 인해 빨라진 환경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다양한 주체들이 대응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부는 당면한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각종 수요 절감과 공급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준비 중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영산강과 섬진강은 가뭄과 홍수 등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영산강은 4대강 중 유역 면적이 가장 작아 수자원 확보 여건이 열악하며, 특히 상류에 담양호 등 4대 농업용 댐이 위치하여 갈수기 분류 유량의 대부분을 광주·수출처리장 방류수가 차지(67%)하고 있다.
 섬진강은 그 수량의 80% 이상을 유역 바깥 지역인 광주·전남·전북 등으로 공급하고 있어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며 유역 경사가 급하고 넓은 평야지대가 없어 집중 호우시 빠르게 물이 흘러 홍수에 취약한 구조이다.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물 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가뭄 대응을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비상시

활용 가능한 미사용 취수원 등 지역 내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댐·저수지·하천수 등 수자원 간 공급망을 연계하여 극한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 공급망 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노후 수도관 정비를 위해 459억원의 예산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도물 누수율을 낮추고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해 31억원을 투입하여 취수원에서 최종 소비까지 도달하는 전과정에 대해 스마트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물수요 관리를 위해서 지난 2월 광양만권 주요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 간 체결한 가뭄 극복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주요 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공정 정비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사용 절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 등 대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자체·수자원공사 간 체결된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려 한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삶의 근원인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영산강·섬진강을 맑고 풍요롭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해야 할 때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즉각 철회하라



기고 모정환 전남도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어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에서도 적자 만회를 위해 작년과 올해 초 세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을 감행했음에도 연료비 급등을 끝내 감내하지 못한 것이 최악의 성적표 요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전이 눈앞에 적자 해소에만 급급해 성급한 인상 정책을 시행한 점에 있다. 한전은 산업별로 충분한 공감대와 고민, 검토없이 적자 해소를 위해 성급히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현재의 농수산업은 존폐위기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기요금은 계약 종별로 농사용·산업용·일반용·교육용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별도의 요금으로 나누어 책정해 오고 있다. 이에 농작물 재배, 시설하우스, 저온저장, 건조 및 양식 등 농수산업 분야는 별도의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작년, 한전은 적자 해소를 명목으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였고 각 용도별 전기요금을 모두 인상

했는데, 그중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됐고 농사용(을)은 47%로 역시 상당폭 인상했다. 적자 위기를 이유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농사용 전기의 판매량은 총 판매량의 3.9% 수준으로 미미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 산업별 특수성, 자립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여론의 못매를 맞은 이유이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 올해 1월 인상분인 1kWh당 3.8원씩, 앞으로 2년간 매년 인상을 예고해 향후 농사용(갑)은 2022년 1월 대비 142.7%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특히 농수산업 생산비중 전기료 부담이 큰 육묘, 시설재배 등을 운영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사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곧바로 농수산업 체산성을 크게 악화시켜, 결국은 생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 농수산업 특성상 전기 등 생산비 상승은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영압박뿐 아니라,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당면한 현재 국민이 느끼는 전기요금의 인상에 대한 체감불가는 상당하며, 농어업인에게는 마치 직격탄을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국회 등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필자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정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한전 본사를 찾아 농

사용 전기요금 인상 전면 재검토와 약관 개정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필자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농사용 전기요금만큼은 인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년 100.4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으며, 농가당 농업경영비 비중은 70.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농사용 전기요금의 판매 비중도 적어 한전 적자 해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현행 수준보다 1% 인상될 경우 비효율적인 전력 소비가 약 23% 감소하는 반면, 농사용 전기기는 1.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농어업 분야는 그 특성상 전력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필자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이미 인상된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상 차액을 지원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철회와 농어업인 대상 에너지 절감사업 확대 등 정부 지원책 마련과 변화하는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농사용 전기공급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수산물은 작은 온도 차이로 생육 장애,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라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여 영세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길 바란다.